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June 2025



들어가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된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복잡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새로운 정부 출범은 답답했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시대적 해결 과제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발단이 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대전환, AI를 비롯한 기술의 급격한 변화,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악화,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단기적인 경제 둔화 가능성도 임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성장과 회복'을 기본 축으로 하여, 외교·통상, 산업, 행정, 환경 등 주요 분야에 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응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국익 우선의 무역 구조화'와 외교 다변화 등의 외교·통상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우리 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는 당면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경,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기 부양책을 펴는 한편 중장기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AI,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컬처, 재생에너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기회가 파생되는 동시에 산업 저변도 확장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고 기업과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기회와 해결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산업계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전략 수립과 대응력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Table of contents

01

Executive Summary

02

새 정부의 공약 정리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이슈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새 정부 정책 방향과 키워드

03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분석

외교·통상

산업·금융

04

결론: 기회와 해결 과제

Appendix 기업 거버넌스 관련 상법 등 개정안 검토

* 본 보고서는 '25년 5월 30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을 감안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한국의 경제 강국 실현

'외교·통상' 정책

→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적 협력 바탕으로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 국익 최우선한 통상 정책
-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외교 영역 다변화

- 주변 4국(미, 일, 중, 러)과의 실용기반 외교 관계
- EU와의 경제협력 강화
- 신아시아·글로벌 사우스 협력

남북 관계 회복

- 한미 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무력 충돌 억제 능력 확보
- 국제사회 협력 통한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

산업·금융 정책

→ AI 기반의 전략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 제시

AI

- AI 민간 투자 100조원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 AI 산업 적용 확대

산업 혁신

- ABCDEF* 분야 육성
- 한국 핵심 산업 대도약: 반도체, 방위 산업, 조선, K-컬처 등

재생에너지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서해안, '30년)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주도 성장

- 지역주도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주식시장 활성화

- 코스피 5000
- 주주환원 강화
- 상법 등 개정
- MSCI 편입
- 디지털 자산 활성화

* AI, Bio/Healthcare, Contents/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기회와 해결 과제

기회

적극적, 실용적 통상 전략으로 무역 리스크 완화, 수출 판로 확대

외교 다변화, 남북 관계 개선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내수 시장 확대

AI 등 첨단산업 중심 전략으로 전방위적 산업 기회 창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탄소 무역장벽 완화)

해결 과제

한국 생산 촉진 정책 수립 단,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충돌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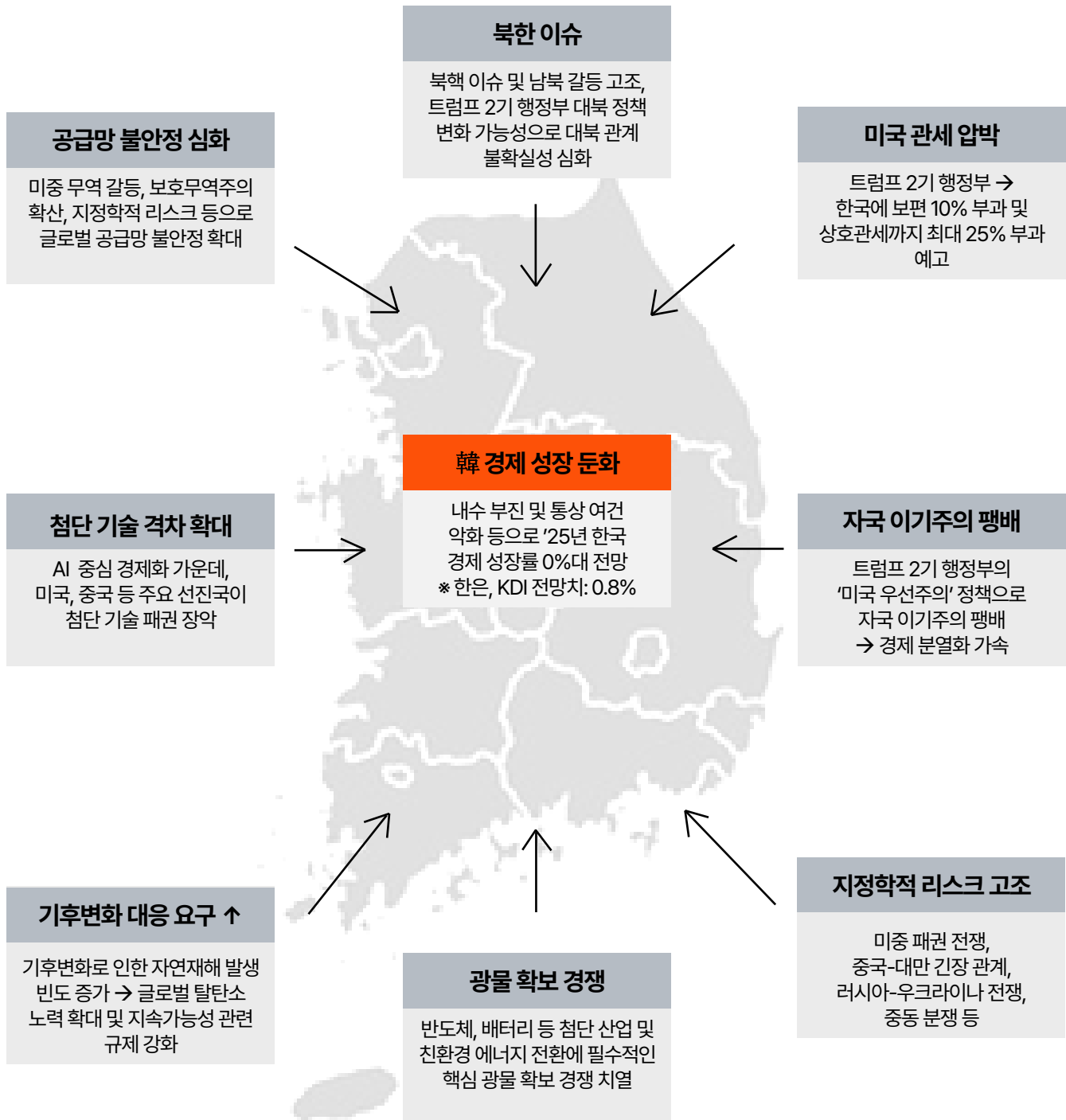
미국 등 기존 주요국과의 균형 속에서 다변화 추진 및 UN 등 국제사회 공조 아래 남북 대화 재개

AI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기후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략 및 실행 방안 구체화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이슈

-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이기주의 팽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산업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더불어,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여건도 악화되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다양한 국내외 이슈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새 정부 정책 방향

-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인 만큼, 10대 공약 대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이며, 외교·통상, 행정, 환경 등의 주요 분야도 경제 활성화 기반으로 정책 기조 설정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

순위*	정책 목표	분야	순위*	정책 목표	분야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경제·산업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	행정·경제·산업
2	민주주의 강국	정치·사법	7	노동 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 되는 사회	교육·경제·복지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경제·산업	8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경제·복지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 하는 외교 안보	외교·통상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등	교육·복지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사법·행정·보건·의료	10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환경·산업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주요 공약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 성장' 중심으로 정리)

분야	순위*	정책 목표 및 이행 방안
경제	1	•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AI 민간 투자 100조원,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규제 특례 기반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3	• (목표)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주식시장 개편,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위한 제도 정비(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산업	1	• (목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 (목표) K-방위산업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 AI 첨단기술 방위산업 R&D 국가투자 확대, 방위산업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방위산업 지원 정책금융 개편 등) - 국내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 K-공항 모델 수출 지원, K-UAM 산업육성 • (목표)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 -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특수선 건조와 MRO 시장 확대,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 (목표) 글로벌 소프트웨어 Big5 문화강국 실현 -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및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목표)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G20, G7 등으로 글로벌 현안 참여 - 무역 구조 혁신 → 국익 최우선의 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환경무역 대응역량,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 외교 영역 확대 및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EU와의 실질 협력 - 수출 산업 보호 → 국산 둔갑 우회수출 및 핵심기술 유출 단속,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국익과 실용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목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 (목표) 5극 3특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 → 위기 산업 구조개혁,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
		•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통한 수출기업 기후 통상 대응 역량
외교·통상	4	
행정	6	
환경	10	

* 정책 순위는 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제시된 정책 우선 순위 순서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재구성

새 정부 핵심 정책과 키워드

-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아래와 같이 재구성 가능하며, 각각의 키워드(Keyword)에 따른 기회와 해결 과제는 다음과 같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Keyword

한국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① '외교·통상' Keyword

→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중심의 외교·통상 정책 수립

1)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 국익 최우선하여 통상 정책 추진
✓ (미국) 국익 중심으로 관세 협상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
-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목표로 통상 협력
-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2) 외교 영역 다변화

- 4국* → 국익과 실용 기반 아래 외교관계 발전
- EU → 통상·공급망·방위산업·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강화
- 아시아 → 신아시아 전략 및 Global South 협력 추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3) 남북관계 회복

- 한미 동맹 기반한, 전방위적 무력 충돌 억제 능력 확보
- 국제사회 협력 통한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② '산업·금융' Keyword

→ AI 기반의 전략 산업 육성, 주식시장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 제시

1) AI

- 세계 3대 AI 강국 실현
- AI 민간투자 100조원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 AI 기본사회 구축
-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2) 산업 혁신

-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 ABCDEF* 분야
- 한국 핵심 산업 대도약: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컬처 등

반도체

- 국내 생산 세액공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 항공 MRO 산업 경쟁력 강화
- 우주산업 R&D

조선

- 스마트·친환경 선박시장 선점
-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확대

K-컬처

- 음식, 화장품, 영상, 음악, 웹툰 해외시장 진출 확대
- K-콘텐츠 문화 수출 50조원

*AI, Bio/Healthcare, Contents/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3) 재생에너지 전환

-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40년 전국화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재생에너지 기반 ESS, 그린수소 확대
- RE100 산업단지 조성

4) 지역 주도 성장

- 지역주도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5) 주식시장 활성화

- 코스피 5000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주식시장 개편, 주주환원 강화
-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 상법 개정 등
- 외국인 투자 요건 개선 → MSCI 편입

참고: 한국 핵심 산업(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컬처)은 새 정부가 현재 발표한 공약 기준으로 정리 ('25년 5월 30일 기준)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외교·통상 정책 (1/3)

-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인만큼, 외교·통상 분야도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구성 → ①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② 외교 영역 다변화임
- 더불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는 '③ 관계 회복'으로, 비핵화 전제로 한 대북 협력 확대가 주요 전략으로 제시됨.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부합하는 부분으로, 한미 동맹 아래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및 기회 높아질 전망이다
- 이 3개의 핵심 키워드 순으로 각각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기회 및 해결 과제를 살펴보겠다

1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무역 구조 재편할 계획이다.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미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의존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경 무역 대응 역량 강화하는 외교 전략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할 전망이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협상에서도 '국익' 최우선에 두고, 주요 국가들의 협상 사례 참고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관련

목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이행 방안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 역량 강화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 강화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한국 '안'으로 공급망 이전 전략)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추진에 따른 수출 안정성 제고 → 특정 국가(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낮춤으로써 관세 압박 등의 통상 리스크 분산 가능
-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도적 대응 가능
- 신흥국과의 통상 협력 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해결 과제

- 새 정부의 전략 산업(예, 반도체) 국내 생산 촉진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온쇼어링* 정책과 충돌 가능 → 득실 따져 국내 생산 촉진 전략화 필요
-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자원 의존도 여전히 높은 상태 → 공급망 다변화에 시간과 비용 소요

* 미국 '안'으로 공급망 이전

외교·통상 정책 (2/3)

2 외교 영역 다변화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기존 주요국(미국, 중국 등)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도 낮추기 위해, 실용 기반의 외교 영역 다변화 전략 추진할 전망이다. EU 및 유럽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줄이고, 신아시아·글로벌 사우스 전략 등을 통해 외교 지평 확대할 계획임

(이재명 정부 공약) 외교 영역 다변화 관련

목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이행 방안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협력 추진 → 통상·공급망·방위산업·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 협력 강화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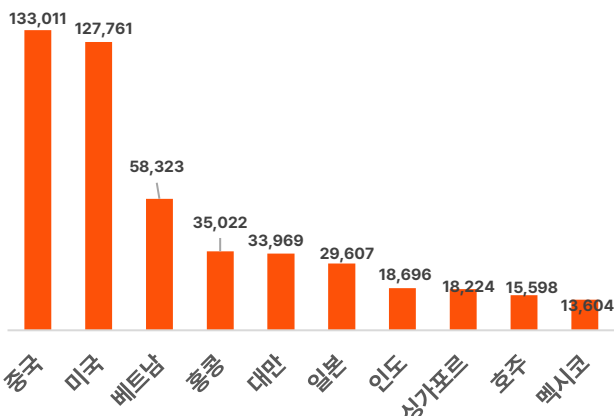
- 동남아·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 →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가능
- EU 및 유럽과의 경제 협력 강화 → 한국 전략 산업 (반도체, 방위산업 등) 수출 확대 및 기술 협력, 투자 기회 확대
- 주변 4개국 실용 외교로 지정학적 안정성 확보 → 미중 무역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갈등 속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경제 안보 리스크 줄이고, 경제 협력 실익 극대화

해결 과제

- EU와의 경제 협력 시, 탄소국경세 등의 탄소 무역 장벽 및 노동 기준 등 고려 필요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은 정치적 불안정, 제도 미비, 낮은 구매력 등으로 경제적 실익 확보에 시간 소요

한국 10대 수출국 ('24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 사우스 협력이란?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신아시아 전략	- 아세안, 인도, 중앙아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 디지털·친환경 산업 전환 중심의 경제협력 확대 - 인프라·에너지·기술 협력 확대	- 공급망 다변화 - 신흥시장 진출 확대 - 외교·통상 지평 확장
글로벌 사우스 협력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의 협력 강화 -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 인프라·에너지·기술 협력 확대 -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공동 추진	- 전략자원 확보 - 국제 연대 강화 -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

외교·통상 정책 (3/3)

3 남북 관계 회복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기반 위에 남북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상호 신뢰 회복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 재개 전망임
-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 카드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 높은 상태임. 미국과 새 정부 대북 정책 기조가 비핵화 기반 경제 협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 높음

(이재명 정부 공약) 남북 관계 회복 관련

목표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이행 방안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남북 관계 회복으로 경제 협력 재개될 경우, 이전 협력 사업 복원(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또는 신규 산업 활성화 전망 → SOC 건설, 통신망 구축 수요 증가 또는 섬유 등 제조업 생산기지 확보 가능
- 북한의 핵심광물 등 자원 개발 협력 가능성 존재 (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전제)

해결 과제

-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등 독자 제재로 인해 직접적 경제 협력에 법적 제약 존재
- 북한의 태도 변화, 군사 도발 등으로 협력 중단 가능성 상존
- 국내 여론 분열 → 남북 협력에 대한 국내 정치적 이견 및 사회적 갈등 가능성

북한 주요 '핵심 광물' 자원

광물/희토류	산업 사용 분야	추정 매장량*
마그네사이트	내화재, 제철, 세라믹	6,000
텅스텐	반도체, 초경합금, 방산	246
흑연	배터리 음극재, 윤활제	2,000
몰리브덴	합금강, 항공기, 촉매제	54
동(구리)	전선, 전자기기, 건설	2,900
철	철강, 건설, 자동차	5,000,000
아연	배터리, 도금, 합금	21,100
금	귀금속, 전자부품	2,000
형석	제련, 유리, 화학	500

* 천 톤

자료: 북한정보포털, 북한지하자원넷 등 종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구분	내용	전망
정책 기조	조건부 협상 재개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 → 1기와 유사한 '툼다운 방식'
외교 전략	직접 협상 선호	동맹국과의 조율보다는 미국 중심 협상 구조 선호
경제 카드	비핵화 경제 발전 프레임 유지	북한에 경제적 보상 제공 가능성은 있으나, 철저히 비핵화 조건 하에서 가능
제재 유지	강경한 제재 지속	유엔 및 미국 독자 제재 유지 → 한국의 독자적 남북 협력에 제동 가능성 존재

산업·금융 정책 (1/13)

- 새 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키워드는 ① AI(인공지능), ② 산업 혁신, ③ 재생에너지, ④ 지역 주도 성장, ⑤ 주식시장 활성화임
- 특히, AI를 신성장 경제 핵심 기반으로 제시함. AI 기술력 제고 및 산업 적용 확대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 AI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정책 1순위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으로 설정함
- 'AI 대전환(AX) 통한 AI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삼고, AI 생태계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지원 정책 제시함. 대규모 AI 투자와 인프라 구축, 범국민 AI 활용 증진으로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하겠다는 게 골자임

(이재명 정부 공약) K-AI 이니셔티브 전략

목표	AI 대전환(AX) 통한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이행 방안	AI 민간 투자 100조원 조성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AI 규제 합리화 → AI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법률 정비, AI 규제 특구 확대 등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 → 국제협력 통한 AI 공동 개발 및 배포 → 다국적 AI 플랫폼 공동 사용 등
	고성능 GPU(Graphic Processing Unit)* 5만개 이상 확보 * 그래픽 처리 장치로, 모델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수학 연산을 수행하여 AI 모델 학습시 사용
	AI 전용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 * AI와 머신러닝 작업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추진
	광주를 중심으로 AI 시범도시 조성
	AI 융합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 구축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산업·금융 정책 (2/13)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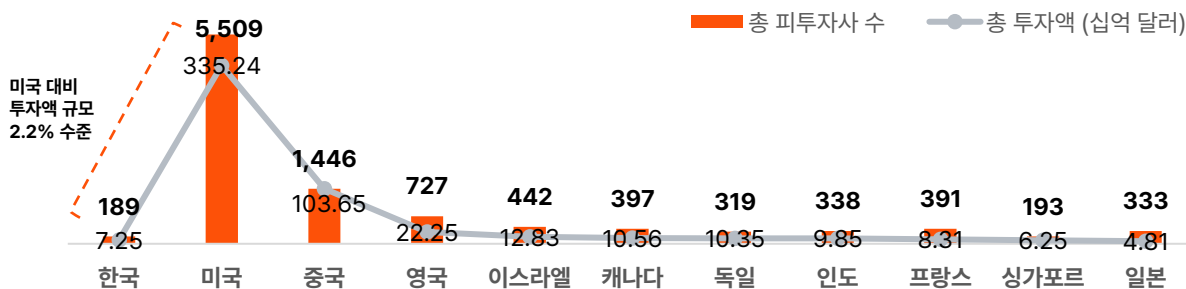
- 현재 주요국은 AI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 중. 새 정부의 'AI 기반 신성장 동력 전략'은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부합되며, AI 인프라 확충과 초거대 AI 모델 대중화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함
 - AI는 국가 주권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이에 따라, 주요국은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AI 패권 우위 확보하고자 노력 중
 - 이에 따라, 새 정부의 AI 민간 투자 확대(100조원 규모), 규제 체계의 합리화,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은 국내 AI 산업의 수준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흐름에 부합
- 새 정부의 AI 정책은 전방위적 산업 기회 창출 구조로 설계됨. 정책 실현될 경우 AI 반도체, 제조·물류, 콘텐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기회 창출 예상됨
 -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은 단순한 기술 개발 지원을 넘어, '인프라 → 제도 → 민간 투자 → 글로벌 확장'까지 연결하는 전방위적 산업 기회 창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 유망한 핵심 산업 분야와 기회 요인은 아래와 같이 전망됨

이재명 정부 AI 정책 방향 기반 주요 산업별 기회

산업	관련 공약 및 약속	기회 요인
AI 반도체	차세대 NPU 개발 및 상용화 지원, AI 반도체 비중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국산화 및 고성능 NPU 개발 수요 증가
제조·물류	산업 전반의 AI 전환 촉진 공약 제시	스마트 팩토리 및 AI 물류 자동화
콘텐츠	초거대 AI 모델 대중화 → 콘텐츠 산업 활용 확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
헬스케어	AI 기반 공공 의료 시스템 도입 가능성 시사	AI 진단·예측 시스템 도입 확대
에너지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및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AI 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및 효율화 관리
지역 산업	GPU-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구축	AI 특화도시 조성(예, 호남) 및 지역 인프라 투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국가 데이터센터 건설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AI 고속도로* 구축 위한 인프라 수요 증가
초거대 AI 모델	모두의 AI 프로젝트, 생성형 AI 전국민 무료 사용 추진	생성형 AI 기반 공공 AI 플랫폼 확산

*AI 고속도로: 전국 곳곳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마치 고속도로처럼 AI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처리 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망을 조성하겠다는 전략

주요국 AI 분야 민간 투자 규모 ('13-23년)



자료: Quid, 삼일PwC 경영연구원

산업·금융 정책 (3/13)

해결 과제

- **한국 AI 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상황임**
 -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AI 산업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중국 순이며 한국은 6위 → 한국의 경우, 미국 대비 AI 수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중 민간투자, 사업 환경, 인재 육성 등에 대대적 보완 필요
- **현재 새 정부의 AI 공약은 큰 그림만 제시된 상태임. 한국의 AI 취약성 및 AI 기술 발전 현황, 주요국 정책 방향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자원 조달 전략(100조원), 규제 개선, 국가 주도 AI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 담긴 로드맵 마련 필요함**
 - 다만,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기존(해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정부 정책과 별개로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 있음
-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은 전력 수급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원전 기조와 충돌될 가능성 높음. 따라서, AI 산업 확대 전략에 맞춰 안정적으로 산업용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별 전력 수급 계획 제시가 필요함**

글로벌 AI 지수 상위 10개 국가 (2024년)

종합 순위	국가 (‘23년도 대비 순위 증감)	실행			혁신		투자		총점
		인재	인프라	사업환경	연구수준	특허(개발)	정책 (정부전략)	민간투자	
1	미국 (=)	100(1)	100(1)	96(2)	100(1)	100(1)	83(2)	100(1)	100
2	중국 (=)	26(9)	66(2)	70(21)	54(2)	69(2)	66(5)	48(2)	54
3	싱가포르 (=)	30(6)	50(3)	55(48)	25(3)	21(5)	59(10)	27(4)	32
4	영국 (=)	32(4)	27(17)	90(4)	23(4)	12(16)	65(7)	25(5)	30
5	프랑스 (▲8)	25(10)	31(14)	70(19)	18(6)	31(4)	59(9)	19(8)	28
6	한국 (=)	20(13)	42(6)	64(35)	11(13)	37(3)	69(4)	14(12)	27
7	독일(▲1)	35(3)	32(13)	83(8)	16(8)	14(11)	59(8)	17(9)	27
8	캐나다(▼3)	26(8)	27(18)	75(16)	15(9)	14(10)	70(3)	23(6)	26
9	이스라엘(▼2)	27(7)	25(26)	47(65)	17(7)	19(6)	35(32)	29(3)	26
10	인도(▲4)	42(2)	15(68)	90(3)	10(14)	13(13)	55(11)	14(13)	24
10개국 평균		36.3	41.5	74	28.9	33	62	31.6	37.4

* 괄호 () 안은 하위 항목별 83개국 중 순위
 자료: Tortoise Intelligence, 삼일PwC 경영연구원

산업·금융 정책 (4/13)

2 산업 혁신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기술 혁신 토대로 ABCDEF 분야 산업 강화해, 경제 성장 도모할 계획임.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AI 제조 혁신화와 빅테크 육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 산업 혁신 전략

목표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벤처 강국 실현
이행 방안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 (F)제조업 등 첨단산업 R&D 최대 규모 투자
	빅테크 기업 육성,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잠재성장률 상향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 혁신 추진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및 모태펀드 예산 확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 및 지역성장 펀드 대폭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통한 벤처 기업 자금 지원
	한국 핵심 산업 대도약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컬처 등 ※ 핵심 산업별 분석 상세는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AI, 방위산업,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구조 전환을 통해 한국 잠재 성장률 제고
-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
- AI 반도체, CDMO(바이오 위탁생산),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성장세 가파름 → 해당 산업의 집중 전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 AI·반도체·방위산업·조선 등 핵심 산업 대도약을 통해,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우위 선점 가능

*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공정 기술을 다루는 산업으로, 주로 부품·소재 산업의 전·후방 공정을 담당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해결 과제

- 특정국과의 기술 협력이 외교 갈등으로 번질 우려 존재 (예,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미국 통상 갈등화 가능)
- 대규모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첨단산업 R&D 확대 등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 → 현실적인 재원 확대 전략 필요
- 기술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특히 중소/지방기업의 소외 가능성 존재
- AI 활용의 핵심은 디지털 데이터임. 중소/지방기업의 경우 AI 활용에 앞서, 데이터의 Digitization(전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 첨단산업 집중 투자로 전통산업과의 생산성 및 수익성 격차 발생 가능

산업·금융 정책 (5/13)

2 산업 혁신 : 반도체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국가 주도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내 생산 세제 혜택, RE100 기반 인프라 지원 등 '한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할 방침임. 해당 전략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이재명 정부 공약) 반도체 산업 관련

목표	K-반도체 대도약 실현 →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건설
이행 방안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 여야 협의 통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된 특별법안 통과 추진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 세액공제 10% 적용 추진 →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반도체 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하여 RE100 달성 지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및 국비 조기 집행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 AI반도체 설계-생산-연구개발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반도체 R&D 및 인재양성 지원 →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위한 R&D 지원 →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반도체 대학원 등 조속 추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AI 반도체로 산업 구조 다변화 및 고도화
- R&D 보조금, RE100 기반 전력 인프라 지원은 AI 반도체 팹 유치에 유리
- 용인 클러스터 조기 착공으로 대규모 고객 유치가 빠른 시일내에 가능해 TSMC·인텔과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
- 반도체 국내 생산 세액 공제 토대로 국내 생산 유인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영향

해결 과제

- 대규모 세액공제 → 국가 세수 감소 → 재정 건전성 부담 우려
- 전력·용수·인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부족 우려
- 대기업 중심의 혜택 집중 가능성이 높아져,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 수혜가 제한될 가능성 높음
- 국내 반도체 생산 확대 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담 증가*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현황

- **AI 반도체 수요 폭증**: ChatGPT류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
-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미국은 고관세 정책 및 CHIPS 법 등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중
- **중국 견제 강화**: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고관세 및 수출 규제 강화 →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리스크 증가

산업·금융 정책 (6/13)

2 산업 혁신 : 방위산업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MRO 육성, 드론·UAM 산업 활성화, 디지털 전환, EU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K-방위산업 생태계' 구축할 계획임. 정책 실현 시, 첨단 기술 기반의 방위산업 수출국 부상 및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 방위산업 산업 관련

목표	우주, 항공, 방위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이행 방안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경쟁력 강화 → 항공정비 부품 국산화, 항공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 항공기 부품 원가 절감 방안 마련 → (사천) 군용기·부품 제조 중심, (인천)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
	K-공항 모델 수출 지원 → 인천국제공항 성공 경험 바탕, 공항산업 해외진출 기반 강화 → 공항 건설·운영·서비스 통합 수출 국가가 주관, 해외시장 선점
	미래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 UAM 상용화 일정 현실화 →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추진 → UAM 지자체 시범사업 및 공공 셔틀·관광 등 실증화 사업 지원 확대 → 초기 R&D 투자 등 지원 확대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확대 추진 → 첨단국방 AI 기술 기반 항공기·미사일·위성 등 전후방 산업 육성 →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 개발 → 방위산업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추진,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통상·공급망·방위산업·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방위산업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 및 수출 지원 시, 한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
- AI, 위성, 드론, UAM 등과의 융합으로 방위산업 고도화 및 수출 품목 다양화 가능
- EU 등 방위산업 분야 수출 다변화 가능

해결 과제

- 미국 우선주의 강화 → 한국산 수출 견제 가능성
-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가 많아 스타트업 참여가 제한적 → 스타트업 육성 전략 마련 필요
- EU 자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중 → 보완적 접근 필요

글로벌 우주·항공·방위 시장 현황

- **우주 산업:** 초소형 위성, 우주 인터넷(스타링크), 우주 관광 등 민간 주도 시장 확대
- **항공 산업:** 정비·부품 교체 수요 증가로 MRO 시장 확대 중이며, 팬데믹 이후 여객 수요 급증하여 상업용 항공기 및 공항 산업 성장 중
- **방위 산업:** 러-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방비 급증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으로 독자적 방위력 강화 흐름 강세 → K-방위산업 부상 전망

산업·금융 정책 (7/13)

2 산업 혁신 : 조선업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스마트 조선소 구축, MRO 산업 육성, 친환경 선박 개발 등을 통해 '첨단 K-조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임. 이 전략은 한국이 글로벌 조선 시장의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회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 규제, 수요 변동성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임

(이재명 정부 공약) 조선업 관련

목표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 실현
이행 방안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 선점 → LNG·전기 선박 경쟁력 향상 → 메탄올·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 친환경 연료 추진선·운반선·화물창 국산화 지원 → 쇠빙기술 적용 선박, 저온·극한 운항 선박 개발 추진 →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및 원격제어 시스템 실증·상용화 선도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으로 해상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 → 선박 세계시장 진출 발판 마련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 설계,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 등 전 공정 디지털화 지원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 확산 → 숙련 인력 확보, 연구·설계 전문 인력 양성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 은행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 유도, 무역보험공사 RG 특례보증 확대 → 친환경 선박 R&D 재개·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
	특수선건조와 MRO(보수·수리·정비) 시장 확대 → 군함 등 특수선 건조 및 MRO 산업 육성, 수요처 발굴 지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트럼프 정부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주목하며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 시사 → 새 정부의 조선업 정책 기반으로 미국 시장 선점 고속화 및 미국과의 통상 카드로 활용 가능
- IMO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급증 → 새 정부의 친환경 선박 지원 정책이 관련 시장 선점 견인 전망

해결 과제

- 스마트 야드 조성,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지방정부와의 협력, 국회 예산 통과, 법령 개정이 필요
- 조선 기자재 일부 핵심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중 갈등 등으로 부품 수급 불안정성 존재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 전략 마련 필요

글로벌 조선 시장 현황

- **친환경 선박 수요 급증**: IMO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LNG,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수요 확대
- **스마트·자율운항 기술 부상**: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 가속
- **특수선·MRO 시장 성장**: 군함, 순찰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및 유지보수 시장 확대

산업·금융 정책 (8/13)

2 산업 혁신 : K-컬처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OTT 플랫폼 육성·세제 혜택·콘텐츠 R&D 확대 등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 제시함. 실현 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이 창작·유통·플랫폼을 아우르는 문화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전망되나,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력 확보 등이 주요 해결 과제임

(이재명 정부 공약) K-컬처 산업 관련

목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
이행 방안	체계적 지원을 통해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 → 문화재정 대폭 증액 → 음식·화장품·영상·음악·웹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K-콘텐츠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 국가 지원 강화 →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 K-콘텐츠(영상 등) 세제혜택 웹툰까지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 추진 →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및 해외불법사이트 대응 국제공조 강화 → 창작비 지원 및 창작공간 마련
	인문학 지원 분야·규모 대폭 확대 →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제작·유통·R&D 전 과정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K-콘텐츠 산업 고도화 및 산업 체질 개선 가능
- K-컬처 지원 확대로 관광,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 성장 견인
- 공공 OTT 플랫폼 구축 정책 → 넷플릭스 등 외국 플랫폼 종속 탈피 시도
- K-컬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작용 → 외교·통상 영향력 확대

해결 과제

-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화 필요성
- 국내 OTT는 여전히 내수 중심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필요

산업·금융 정책 (9/13)

3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함.
이를 위해,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할 계획임
 -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이유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하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무역 장벽 등 수출 대상국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출 유지 및 확대,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임

(이재명 정부 공약) 재생에너지 전략 관련

목표	경제 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행 방안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산단 조기 확대 *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 저장 장치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분산에너지 편의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기술 조기 개발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효율화산업 지원 확대
	'햇빛연금'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태양광 또는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소득 보장형 제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 RE100 산업 단지 확대 → 친환경 제조 경쟁력 강화 전망
- 재생에너지 사용한 수출품 생산이 국내에서 확대됨에 따라, EU CBAM(탄소국경제도)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 가능
-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 → 해외 조달, 수출 입찰 경쟁력 상승 전망
-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 자립도 향상 및 지역별 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해결 과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 및 그린워싱* 논란 가능성 존재
-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 및 한전 재정 부담 증가
-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예, 경제적 손해, 생태계 파괴 등)로 입지 확보 갈등 가능

* 그린워싱: 겉으로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국산 화석연료의 수입과 사용을 늘리는 경우,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린워싱 논란 불러일으킬 수 있음

산업·금융 정책 (10/13)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란?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 지대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안)

구분	주요 내용
구축 구간	서해안 → 영호남 → 동해안까지 연결하는 U자형 해상 전력망
주요 에너지원	남해서안 해상 풍력, 태양광, ESS, 그린 수소 등
연계 산업	RE100 산업단지, 전기차·이차전지·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산업

완공 계획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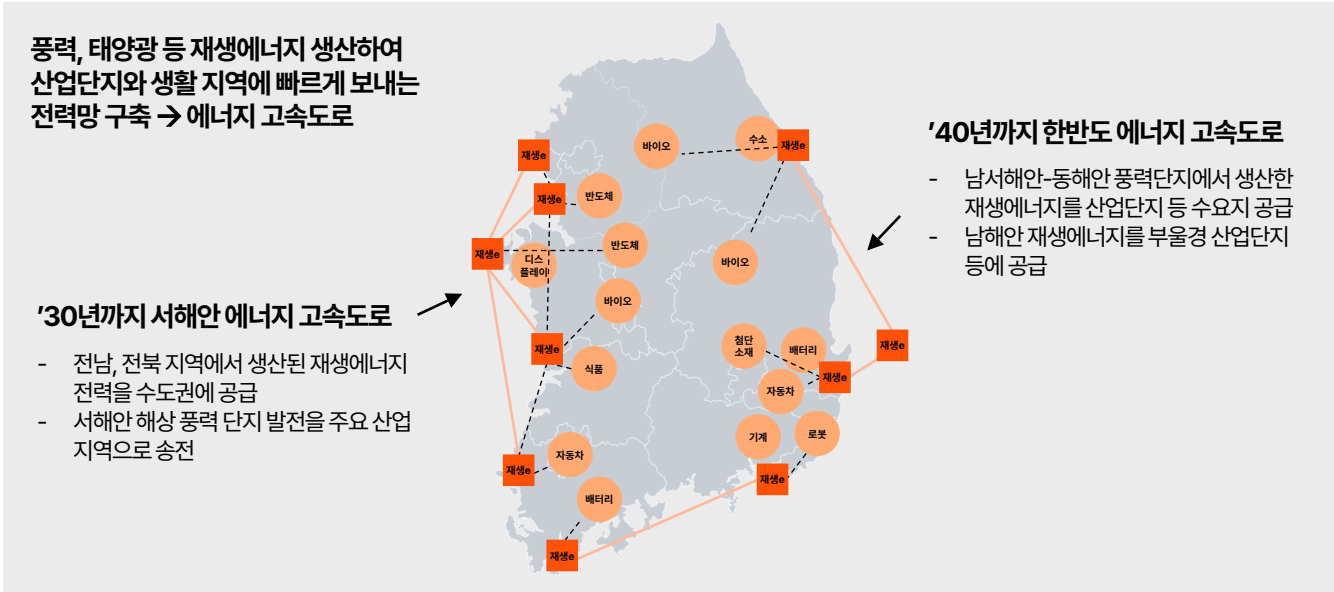
- 1단계: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해상·육상 복합 그리드 구축)
 - 서남 지역에 HVDC 해상 송전망, HVAC 육상 송전망 건설
 -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발전을 주요 산업지역으로 송전
- 2단계: ‘40년까지 한반도 전역 U자 형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남해안-동해안에 HVDC 해상전력망 구축
 - 전남, 경남 등에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 및 발전 전력을 수요지로 공급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수도권 중심 전력 수요 분산
- 지역 산업 유치 및 균형 발전
- 글로벌 RE100 대응 역량 강화

에너지 고속도로 예상(안)

재생e 에너지 고속도로를 위해 신규 건설되거나 기존에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지역별 산업단지 등에 연결



자료: 민주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역할과 지원 방안’(25년 3월) 토대로 재구성

산업·금융 정책 (11/13)

4 지역 주도 성장

- 새 정부는 지역 주도 성장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할 계획임. 특히, 5극 3특* 중심 발전 전략으로, 지역별 특화 사업 육성 및 활성화해 지역 균형과 경제 성장 촉진할 방침임

* 5극: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부권·호남권(5대 초광역권), 3특: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이재명 정부 공약) 지역 주도 성장 전략 관련

목표	5극 3특 추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달성
이행 방안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폭 확대해 지역 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위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주거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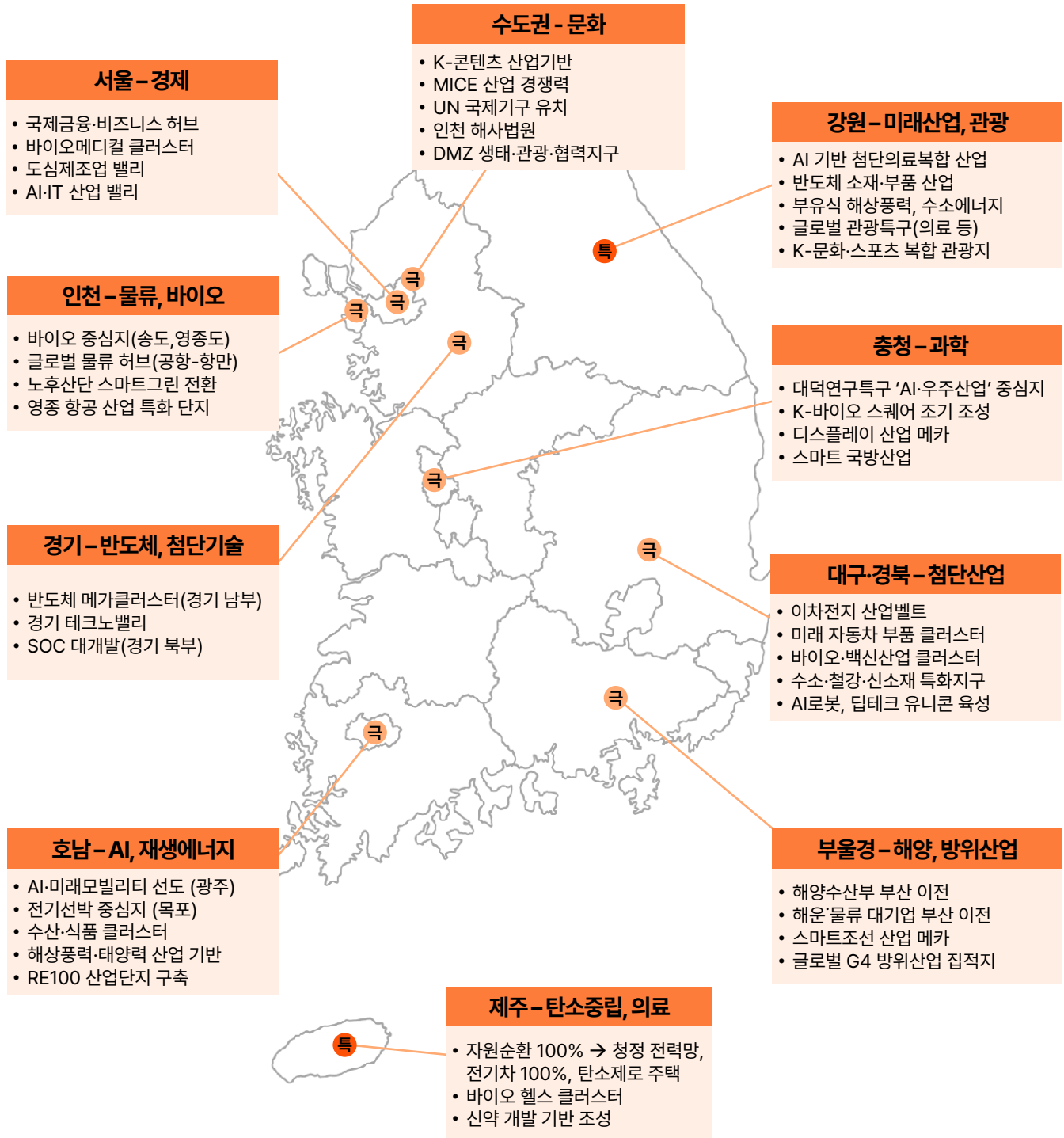
- 지역 산업 다변화 및 수출 기반 확대 가능 → 초광역권별 대표 산업 육성은 지역 특화 수출 품목 창출 가능하며,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입지 강화로 연결
- 지방 투자 확대 및 기업 분산 전망 → 지방 보조금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지방의 산업 생태계 형성 가능
- 농어촌 관광 및 경제 활성화 → 내수 진작과 지역 기반 서비스 산업 성장 전망

해결 과제

- 지역 거점과 비거점 간 불균형 확대 가능성 존재: 초광역권 중심의 개발은 비수도권 내에서도 중심-비중심 지역 간 격차 초래
-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은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화 장치 마련 필요

산업·금융 정책 (12/13)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성장 계획(안)



참고: 지역 주도 성장 계획(안)은 새 정부가 현재 발표한 공약 기준으로 정리 ('25년 5월 30일 기준)

산업·금융 정책 (13/13)

5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 새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장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목표로 상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이재명 정부 공약) K-주식 활성화 전략

목표	주가지수 5000 시대
이행 방안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쪼개기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로드맵 마련 →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언론 종합

이재명 정부 디지털(가상) 자산 관련 공약

1.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및 법제화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용자 보호, 산업 육성 관련 법률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책 조율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2.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3.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조성 → 국부 유출 방지 및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 강화 목적

4.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 등

- 1 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 검토
-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상법 등 개정 추진 방안

* 상세 내용은 'Appendix' 참고

주요 안건	현행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 회사	이사 충실 의무 대상 → 회사 및 주주 전체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 투표 정관 배제 가능	집중 투표 정관 배제 금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분리 선출 위원 수 → 1명	분리 선출 위원 수 → 2인 이상 단계적 확대
합병시 공정가치 평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법정 산식으로 규제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기존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직접 권리 상실	자회사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
자사주 제도 개선	자사주 취득 후 보유 및 처분 가능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소각

기회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정보공시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가능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글로벌 자금 유입 확대
-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 → 중소형주 보호 정책 등은 KOSDAQ·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

해결 과제

-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미국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불안정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
- MSCI 편입 기준이 엄격해, 이에 대한 준비 부담 존재

기회와 해결 과제 (1/2)

- 새 정부는 산업 혁신과 외교·통상 전략의 융합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AI, 바이오, 방위산업, 콘텐츠,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 전략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외교 다변화, 남북관계 정상화 등 외교·통상 전략이 병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정책의 기회 요인과 도전 과제는 아래와 같음

기회

국익 중심 무역 구조와 외교 다변화 정책으로 '무역 리스크 완화', '수출 판로 확대' 가능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이전 또는 고율 관세 부담이라는 선택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이 가운데, 새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통상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동 등 신아시아, EU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 정책 실현 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와 관세 부담이 줄고,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

외교 다변화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전략으로 공급망 안정화 전망 및 내수 시장 확대

- 외교 다변화를 통해 중동,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공급망 리스크가 분산되고,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음
-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 SOC 협력 확대 등 경제 협력 기회가 증가해 내수 기반 사업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가능함 (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전제)

AI 기반 신성장 동력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대

- 국가 주도의 AI 인프라 확충과 AI의 대중화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더불어, AI의 산업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반도체, 제조·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 단지 지원 등으로 친환경 제조 기반 강화되어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RE100 산업 단지 확대 등으로 친환경 수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 무역 장벽 대응(예, EU CBAM) 가능해질 전망임
-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 자립도가 향상되고, 친환경 제품 생산 수요가 높은 국내외 기업 유치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기회와 해결 과제 (1/2)

해결 과제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일부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충돌 가능

-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한국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온쇼어링* 정책과 충돌 가능하기 때문에 득실 따져 지원 정책 구체화할 필요 있음

* 미국 '안'으로 공급망 이전

현재 AI 정책은 큰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자원 확보, AI 인프라 구축, 인재 확보 등의 구체적 로드맵 필요

- 한국 AI 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은 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상황으로, AI 중심의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지원 필요 분야 식별해 정책 수립해야 함. 특히, AI 투자 자원 확보, AI 인프라 구축, 인재 확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로드맵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첨단 기술은 시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육성 정책이 이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음. 따라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한국 기업은 기존(해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신속해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구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한국은 반도체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소프트웨어 기술 접목은 부족한 상태로, 고부가가치 AI 산업 전환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임

기후 문제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방안 제시 요구

-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한 정책은 방향성 수준에서 제시된 상태로, 정량적 목표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 수립 필요함

정책 지속성 확보 필요

-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법제화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Appendix) 기업 거버넌스 관련 상법 등 개정안 검토 (1/2)

새 정부는 주주 권익 보호를 기반으로 주식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등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주요 개정 사항은 6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현행 상법

-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만 규정 →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규 마련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계열사 합병, 유상증자 등의 사안에 일반주주 이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지난 2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으나,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해 재의결 거쳐 부결. 이후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황

개정방향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

(2) 집중투표제 활성화

현행 상법

- 집중투표제 허용하나 정관으로 배제 가능. 집중투표제 실시하면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므로,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
-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는 조항 포함

개정방향

- 집중투표제 활성화 통해 일반주주 권익 강화

(3)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현행 상법

- 현행 상법은 1명은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고, 그 이상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주주는 3%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 가능. 반면, 일괄 선출 경우 지분율 제한 없이 이사를 일괄 선임하고 그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 지배주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큰 구조

개정방향

- 감사위원 중 분리 선출되는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4)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등

현행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령은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법정 산식으로 규제

개정방향

-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확대 → 법정 산식이 정하는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 가격 등 정하도록 규정

(Appendix) 기업 거버넌스 관련 상법 등 개정안 검토 (2/2)

(5)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현행 자본시장법

- 모회사가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상장시키는 경우, 일반주주들은 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만 부여 받을 뿐 분할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보장받지 못함

개정 방향

- 모집하는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이익 보호.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비율은 다양함

(6) 상장회사 자사주 제도 개선

현행 자본시장법

-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보유나 소각 모두 가능 → 자기주식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일반주주의 의결권 약화 등의 문제 발생.

개정 방향

- 자기주식 취득시, 원칙적으로 소각만 가능 → 자기주식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유도. 지난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을 금지한 것에 더하여 보다 강화하는 조치

Check point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분할, 합병 등 구체적인 자본거래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 포함
-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거론되었던 다양한 방안(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접근)을 대부분 아우르고 있음
-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주주 권익이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해야 함

Contacts

문 홍 기 Partner

hong-ki.moon@pwc.com

임 기 호 Partner

ki-ho.im@pwc.com

임 상 표 Partner

sang-pyo.y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S/N: 2506W-RP-063

© 2025 PwC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